

청년세대문화 현장토론회

여의도연구소 청년정책자문단 출범 및
청년세대문화 현장토론회

- 일 시: 2005.5.19(목) 오후 5시~9시
- 장 소: 대학로 발렌타인 극장

청년세대문화 현장토론회

여의도연구소 청년정책자문단 출범 및
청년세대문화 현장토론회

행사일정

17:00~17:20 등록/식사

17:20~17:45 소통의 장을 열며

- 청년정책자문단 및 여의도연구소 소개
: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
- 들어가는 말씀: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희망을 말해보는 자리]

17:50~19:15

- 사회: 이계진 (국회의원)
- 희망 1: 김성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희망 2: 홍송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희망 3: 이우선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 희망 4: 김재성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 희망 5: 권은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희망 6: 조민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모두 함께 말해보기 : 참가자 전원

19:15~19:30 잠시 쉬어가기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

19:30~21:00 연극공연: “다녀왔습니다”

21:00~ 또 다른 소통을 기다리며

목 차

▷ 여의도연구소 소개 / 1

▷ 발제문

- 한국 정치에 대한 희망 / 7
 - 김성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통일에 대한 희망 / 19
 - 홍승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청년의 미래, 실업 탈출 / 29
 - 이우선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 / 39
 - 김재성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에 바람 / 51
 - 권은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청년이 만들어가는 한국사회의 신문화 / 63
 - 조민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여의도연구소 소개

여의도연구소 설립목적



여의도연구소는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의 비전과 전략을 연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한나라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20조)

당과의 관계: 자율과 독립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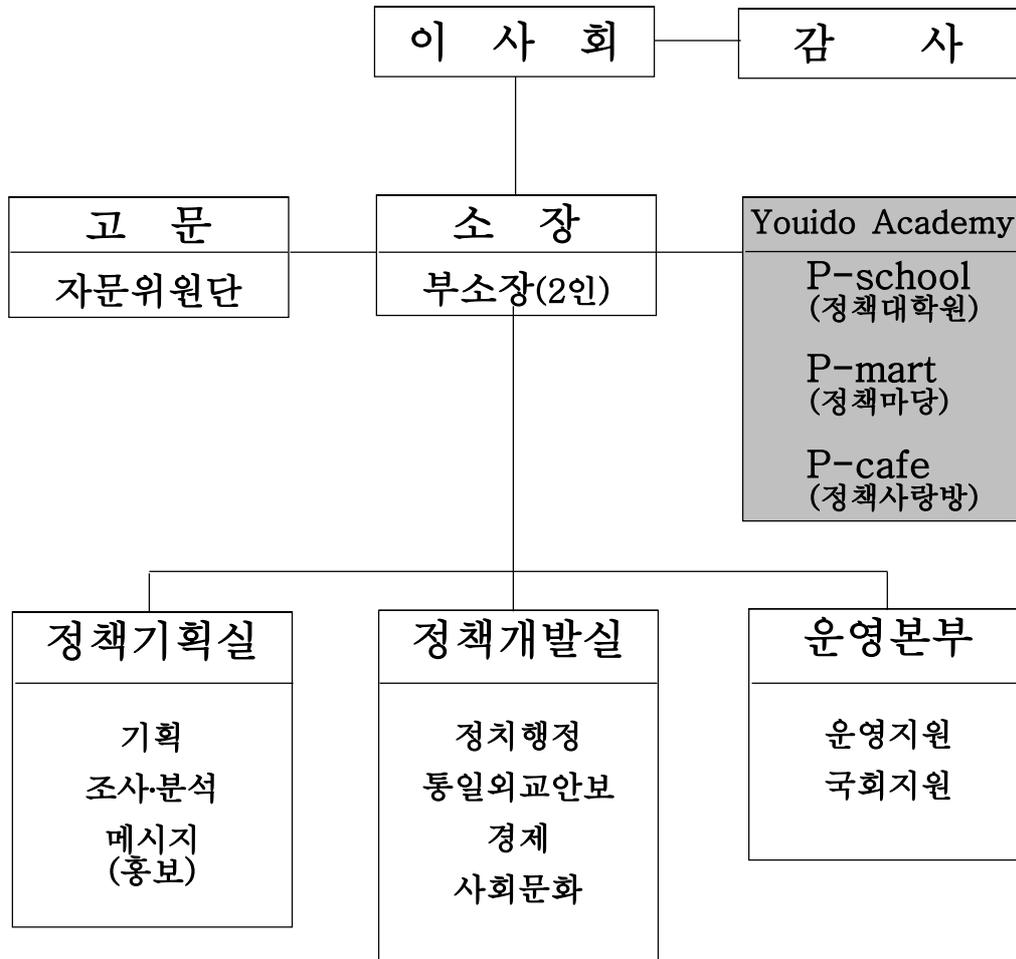
여의도연구소는 당이 전액출자한 재단법인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내용은 그 어떤 제한이 가해짐이 없이 **자율과 독립**을 견지할 것이다.

(95.1 설립취지서 중에서)

여의도연구소 연혁

2005. 4.20 과학기술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초일류 과기강국으로 가는 길”
 2005. 4. 7 창립10주년 기념토론회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2005. 2.23 정책토론회 “노무현 정부 2년과 나라선진화의 길”
 2005. 1.27 사회복지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총총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
 2005. 1.20 정치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로”
 2005. 1.19 윤건영 8대 소장 취임
- 2004.12.28 경제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확트인 시장, 그늘없는 세상”
 2004.12.21 통일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선진통일의 길”
 2004.11.16 교육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 “교육강국 2012”
 2004. 8.11 박세일 7대 소장 취임
 2004. 5.11 박근혜 11대 이사장 취임
 2004. 2. 3 2004 심포지엄 “선진국을 위한 선택: 좌절과 분노를 넘어 희망을 찾아서”
2003. 9. 3 윤여준 6대 소장 취임
 2003. 9. 3 최병렬 10대 이사장 취임
2000. 2.14 유승민 5대 소장 취임
1999. 3. 4 창립 4주년 기념정책토론회 “김대중 정부 1년: 신권위주의와 신관치경제”
 1999. 1.27 이회창 9대 이사장 취임
- 1998.12.18 이회창 8대 이사장 취임
 윤여준 4대 소장 취임
 1998.11.16 신경식 7대 이사장 취임
 1998. 5.28 공개학술포럼 “지방세제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1998. 5. 8 석종현 3대 소장 취임
 1998. 2.27 서청원 6대 이사장 취임
 1998. 1.20 김태호 5대 이사장 취임
- 1997.11.17 국민대토론회 “정치혁신과 경제 살리기”
 1997.11.12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1997. 6.27 박관용 4대 이사장 취임
 1997. 5. 9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개선 건의안”
 1997. 2.24 창립 2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문민정부 4년 성과와 과제”
 (Four Years of Civil Government: Its Achievement and Future Goals)
 1997. 2.14 환경정책세미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대안”
1996. 3. 8 창립 1주년 기념 청년토론회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신한국 비전”
 1996. 2. 7 윤영오 2대 소장 취임
- 1995.11.19 강삼재 3대 이사장 취임
 1995.10.19 문정수 2대 이사장 취임
 1995. 5.12 창립 심포지움 “세계화 시대의 지방화”
 1995. 2.23 이영희 초대 소장 취임
 김덕룡 초대 이사장 취임
 1995. 2. 3 외무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

여의도연구소 조직



여의도연구소 주요사업

정책연구개발

☑️ 중장기과제 연구

- 국가 선진화 비전 및 분야별 전략 연구 개발

☑️ 당 정책과제 연구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이슈 분석 및 대안개발

정책수립 지원

☑️ 당 정책활동 지원

-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초자료 및 자문제공

☑️ 정책토론회 개최

-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여론형성

자료출판 제공

☑️ 정책자료 생산

- Issue brief, Research 및 기타 정책자료집 발간

☑️ 자료회원제도 운영

- E-mail 로 News letter 및 연구보고서 제공

교육연수 실시

☑️ 당 정책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 P-mart 개설(주1회) 및 정책인턴 양성

☑️ 당원연수 및 시민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기 과제로 추진

정책지식 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 전문 연구인력 현황 DB화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대사업 활성화

《 《발제문

한국 정치에 대한 희망

김 성 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감성정치와 감성세대를 중심으로

김 성 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들어가며

처음 ‘한국 정치의 희망’ 이라는 큰 주제가 나에게 던져졌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정치라 함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왔고, 나 역시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직시하고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 더 꼼꼼이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면 근시안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궁극적인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치의 희망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나는 이러한 희망의 가능성을 지금 이 시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찾고자 하였다.

2. 지금의 한국정치는 감성의 정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한국사회의 감성정치적 경향과 관련해서 걱정과 함께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 감성적인 측면에 호소함으로써 그 본질을 흐리고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서 정책이나 인물대결보다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득이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인 셈이다. 특히 주요 정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벤트 정치'가 선거판을 휩쓸면서 후보에 대한 차분한 검증이나 논리적인 접근이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감성정치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를 외면해야 하는 것일까? 한 학자는 감성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감성과 욕망의 중시가 개인이 지닌 욕구나 감정에 따라 세계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행동해도 좋다는 것이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한 개인의 욕구나 욕망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세계와의 쌍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의 욕망과 충동에 대한 강조는 진리나 합리성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양한 욕구와 이해, 관심과 신념을 가진 개인들 간의 논의와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선택적으로 형성되는 상호주관적인 협동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상에서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감성이라는 것은 지금의 대한
민국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하나의 큰 흐름이다. 따라서 그 흐름을
외면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
는 것과 동시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감성정치와 감성세대

1) 감성시대를 이끌어가는 감성세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감성이라는 요소를 정치에 활용해
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젊은 세대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이르는 소위 감성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 감성세대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의 허위와 기존의
권위를 벗기고, 이에 맞선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기성세대
가 익숙해진, 적당한 편법과 적당한 부도덕이라는 윤희유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고교 내신 등급제, 두발 자유화와 관련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10대 후반 고교생들의 모습은 이들이 더 이상 기
성세대가 인식하듯이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막연한 집단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대로 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이들은 이러한 감성세대들의 지배력이 앞으
로 4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인들
은 일정 정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

2) 인간은 믿는 것을 보는가? 보는 것을 믿는가?

이러한 감성세대는 다양한 미디어들을 매개체로 주로 비주얼적인 측면에 많이 의존하는 세대이다. 그렇다면 이들 감성세대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단순히 보이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과 믿음을 만들어 가는 것일까?

오래된 철학적 문제이자 심리학적 문제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는 것을 보는가? 보는 것을 믿는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주로 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첫째 인간은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중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사람은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중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남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은 자기고양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관을 유지시키고자 자신에게 이로운 정보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것을 보게 된다.

셋째로 인간은 인지적 보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생각을 바꾸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웬만하면 기존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¹⁾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감성세대가 미디어를 통한 비주얼적인 측면에 많이 의존한다고 해도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 그들이 살아오면서 배우고 느낀 믿음과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성세대들에게 정치적 믿음과 신념을 올바르게 갖도록 체계적이고 올바른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4. 감성세대에게 정치적 신념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구체적 방안

감성세대들에게 정치적 신념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당과 정치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믿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믿음은 보통 청소년기를 거쳐 10대 후반과 20대 후반에 많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10대 후반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20대 이상의 대학생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치적 변방세대에서 중심세대로(10대 청소년집단)

얼마 전부터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 15개 청년 단체가 모여 조직한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 연대'는 이미 작년 5월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지

1) 신병철 著, 브랜드인사이트, 2003

난 4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내놓았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서 유독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과거와는 달리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의식이 성장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확대된다면 더 이상 지금의 10대는 미래의 유권자가 아닌 현재의 유권자로 대두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학교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올바른 정치적 신념과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행 우리의 교육제도 아래서 중·고등학교 시절 배우는 정치에 관한 교육은 이론과 지식적인 측면에 묶여 있다. 물론 이론을 통한 지식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이러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당장의 교육제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당의 차원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10대 감성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회제공 방안

(1) 미국의 사례

청소년들의 정치 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음과 프로그램이 시도되었다고 한다. 즉 위스콘신 주에서 시도된

‘지역사회문제’와 인디애나 대학에서 시도된 ‘비교정치체험’이 그것인데 이들 연구는 종전의 정치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학문중심적임을 비판하고 정치적인 생활 영역에서 바람직하고 능률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보다 실질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크고 작은 행사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적 경험을 갖게 하면서 문제의 성격을 이해하게 함은 물론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육성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도 일정한 기초 지식과 문제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교실에서 배우는 이러한 지식을 실제적 생활방면에 적용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역할과 봉사, 협동, 타협하는 능력, 그리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스스로 공헌하고자 하는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능력을 익히게 함으로써 기초적인 정치적 태도의 육성을 기하고 있다.²⁾

(2) 한국의 사례

작년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치야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두 차례에 걸쳐서 청소년 정치캠프를 실시했다. 물론 소수이긴 했지만 참가한 청소년들의 호응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가해 청소년들과 함께 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정치캠프에 참가한 학생이 선거권을 부여 받고 당장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어떤 당에 투표를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이러한 작은 행사들이 결국에는 현

2) 박용현 著, 우리의 이념·가치성향과 정치교육, 1997

재의 유권자로 바뀐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적 신념과 믿음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유권자로 정치적 무대의 중심에 다가가고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방학 등의 기간을 이용해 정치캠프 혹은 정치학교 등의 기회를 통해 정치인들과 함께 현실정치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감성세대 정치의 중심에서 (20대 대학생집단)

어떠한 이들은 지금의 20대들을 오히려 386세대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세대라고 한다. 특별한 정치적 변혁의 시대를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접하며 자라 왔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세대라고 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20대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들이 가져온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극단적인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세대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감성세대의 중심에 있는 20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다양한 의식과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물론 어느 세대나 다양한 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20대는 그러한 다양성의 정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20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들이 확고한 정치적 신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4) 20대 감성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기회 제공 방안

20대의 감성세대들은 10대의 감성세대들과 다르게 어느 정도 정치적인 신념과 믿음이 자리 잡힌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세대를 위한 각 정당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적 신념과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기존에 본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믿음들이 자신의 사고와 가치 판단과 일치 하는지에 대한 확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친구는 자신이 기존의 틀 안에서 큰 변화 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당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성정치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당과 정치인들은 20대 감성세대들과의 대화의 채널을 항상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채널이 실제로 당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의 활동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러한 채널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20대의 감성세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믿음이 자신의 가치관 혹은 사고체계와 일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 마치는 글

한국 정치의 희망은 분명 젊은 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당과 정치인들은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다. 흥피를 이용하고 요즈음 유행하는 연예인과 대중가요를 아는 것만으로 젊은 세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진부한 생각이 되어 버렸다.

물론 그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관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이제는 정치의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신념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등장한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될 때 한국정치는 희망의 정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발제문

통일에 대한 희망

홍 송 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1c 통일한국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나라당

홍 송 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들어가며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통일에 대한 주제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정책자문단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통일과 그에 대비하여 한나라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희망과 미래는 20대의 여론을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이른바 디지털세대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매우 감성적이며 여론에 쉽게 좌우되며 시각적인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실력이 있는 가수라 하더라도 이미지가 좋지 않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나쁘면 이유 없이 안티세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미지의 영향력이 가장 큰 세대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다보면 가끔 정치적 발언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들과 댓글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보수적인 성향의 글이 올라오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보수적인 세력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어린 네티즌들은 내용도 모른 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기게 되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한나라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감성을 잡을 수 있다면 이러한 현상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이미 블로그, 미니홈피로 부분적으로 20대의 관심을 끄는데 선점했습니다. 특히 미니홈피에서 볼 수 있는 사적인 이야기들이나 개인적인 사진 등은 네티즌과의 친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의 이미지보다는 개인 의원님들의 이미지가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대표님의 경우에서 보듯 말이죠.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특히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젊은층에 어필하는 내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청년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일’에 대한 주제는 민족성을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와 감성의 활용은 급속도로 정책이 홍보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한나라당이 지난번에 보여준 ‘태극기배너달기’운동처럼 정치적 접근보다는 애국적인 접근이 더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듯이,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안1)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한다

현재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로서는 원론적인 얘기이겠지만, 긴밀한 한미공조, 다각적인 외교 노력과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북한은 열악한 국내사정과 대외적 고립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핵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북한에게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김정일과의 대화와 협상에 있어서 상식과 원칙 수용을 고집스럽게 제시하고 김정일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정부 대북 정책과 외교정책의 주요목표 및 수단으로 삼는 공세적 외교 및 대북 정책이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화해 및 유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적절한 수준과 방법으로 인권문제를 제기 혹은 추진해 나가는 “병행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온전략 혹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포용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경분리” 정책을 기조로 하여 정치적, 외교적 갈등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남북교류를 진행하더라도, 한편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의 많은 현안 중에서 인권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연계전략”으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록 북한의 인권을 당장 개선하거나 해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in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한 나라의 인권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국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불참 하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룰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북한 내의 수용소나 구류장에 대한 토론과 논의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또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는 시점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지난 11월 미국 의회는 북한의 민주화 및 자유화, 탈북자 지원 방안 등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정책을 담고 있는 '2003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탈북자 보호 활동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 상정과 법안 채택의 과정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유엔 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기권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약자의 편에 선다는 진보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으며, 김정일 체제를 개선의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햇볕정책과도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반면 같은 장소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과거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큰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에는 현재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 이중적 인권 의식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봐야 할 일입니다.

이에 관련된 일부 국내 NGO, NPO 단체들의 활동이 있어왔지만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4·19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대 총학생회는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미국 내 70여개 대학의 교포 학생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LINK(Liberation in North Korea)와 학내 동아리 Hello NK(North Korea) 공동 주최로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전, 다큐멘터리전, 강연 등의 행사와 더불어 학생들과 탈북자들이 직접 북한식 주먹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대학가에 확산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등은 이미 탈북자들과의 간담회 같은 소규모 행사를 해왔고 앞으로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회의 발언권이 보다 증대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필요에 따라 정부정책을 견제 혹은 통제함으로써 대북 정책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북 관련 법안의 심의, 결의문, 특별보고서, 청문회 등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안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의 제시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대북인권문제의 활발한 논의는 국민전반에 걸쳐 이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은 참신한 지지자들을 모을 것이고 여론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북한인권의 참상과 그 관심을 호소하는 북한인권문제를 이슈화시켜서 그에 대비한 정책을 알리고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호응을 높이는 방안은 잠재적인 한나라당의 정책적 지지세력을 만들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지지세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각 대학동아리들과 NGO, NPO 사회단체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지지세력까지 합쳐져 국내외 여론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문제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커지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가들을 설득하거나 압력으로서 작용할 것이고, 결국 북한정권이나 관련국가들의 태도나 정책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유럽국가 등 인권선진국에서 민간단체, 의회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 국민전체의 여론형성과 적극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네티즌을 비롯한 젊은 세대에 공감을 줍니다.

한국 내부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제도적, 법적 정비를 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고 정당성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통일정책의 정당성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2)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나라당, ‘우리는 미래로 간다’의 이미지 구축해야

통일이후의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대책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또 된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최소생계보장, 직업교육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화적 차이와 역사교육문제, 언어적인 이질성 등은 향후 논의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통일 후 부딪칠 문화적 충격완화와 정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한나라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제시와 연구활동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공론화시키고 네티즌의 관심을 끄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자유민주체제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와 복지단체 등 비영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혼란가중 이외에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악화와 부실한 북한경제를 남한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 한나라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제안을 통해 노

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나라당의 미래지향적 이미지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통일은 정책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이 한 목소리로 통일을 갈망하고 외칠 때, 그것은 좋은 정책과 더불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통일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통일의 선봉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 《발제문

청년의 미래, 실업 탈출

이 우 선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청년의 미래, 실업 탈출

이 우 선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1. 현재 우리의 대학생들은 취업난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청년 실업이 9%대에 돌입했다고 한다. 대학은 더 이상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학원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누구나 한 번 씩은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생각하고, 토익 점수에 목숨을 걸고 경력 쌓기에 열을 올린다. 요즘 대학생처럼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때는 없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인턴, 해외연수, 외부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반면 교양과 기본 소양을 쌓고 이 시대에 대해 진지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대학생 문화는 옛 일이 되어 버렸다. 여러 분야를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기 위한 활동보다는 대부분이 이력서에 경력 한 줄 채우려는 목적이다.

대학생이 느끼는 취업난 실상은 어떨까.

- 자발적 실업자가 많이 늘고 있음.
- 공무원시험과 임용고시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음.(공급과잉 현상)
-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 약대로의 재입학과 편입이 늘고 있음.
- 직업전문대학교로 재입학하거나 상당수의 취업 초년생들이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음.

1) 양극화현상

기업 : 인재의 부재

구직자 : 원하는 일자리가 없음

기업은 항상 성장하려 하고 싶어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람 그 자체가 자원이 된다.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은 많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극히 소수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경력이 많은 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소수인 경력자들은 스카우트 제의에 몸살을 앓을 정도지만, 그 외 다수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일자리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2) 착시 현상

i) **마찰적 실업** -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이 아닌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 구직자들이 대기업, 공무원, 교사, 공사 등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면서 취업 준비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다.

ii) **잠재적 실업** - 표면적으로는 실업이 아니지만 노동자가 그의 한계 생산력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다면 생산력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하고 잇는 상태

>> 인턴, 비정규직 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위한 경

력쯤으로 여겨 발생한다.

※ 따라서 실질적인 실업률 통계 수치보다 더 취업난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

2. 취업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 실업률 5%, 체감 실업률 9.8%. 원인은 무엇일까?

고학력 청년 인력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 증가, 선진국 형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은 높아만 간다. 고학력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이나 고급 두뇌의 산업 쪽에 취업하려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중소기업이나 3D직업을 기피하게 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 졌으나, 여전히 제약적인 부분이 많다. 전통적 사상이 곳곳에 남아있고, 직업여성에 대한 육아정책이 잘 확립되어있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크다.

>> IT등 기술 집약적 고 부가가치 산업이 두드러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한다. 다수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적은 소수의 인재로 산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 핵심적 사안은 개인, 기업의 문제보다는 "비 시장적인 정부 정책"에 있다.

1) 외환위기

- IMF 고금리 정책 25%(12~5월까지 7개월간 15000개 이상 기업이 부도,

정상기업 조업률 60%이하)

- 살아남은 기업들의 혹독한 구조조정(금융 자기자본 비율 8%, 일반기업 부채 200%)

2) 외환위기의 책임을 기업에게 돌림

- 출자총액 제한 등의 규제 강화 → 대기업의 투자를 막게 됨.

3) IMF 때 기업 도산, 무분별한 벤처지원

- 벤처 붐 조성, 거품이 빠지면서 은행이 도산(코스닥 지수) ->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투자를 안 함. 자금난, 악순환

4)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일자리가 줄어 듦

- 일자리 개념 변화가 일어남. 평생직장 → 불확실성
- 단기간 구조조정의 부작용

5) 기업들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 개인들의 대응 속도가 기업변화속도에 따라가지 못함 → 인재부족, 교육문제발생

6) 학력과 일자리 간 불일치 문제 심화

-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맞추어 직종 구성도 고도화되면서 높은 학력 수준을 요구하는 상위직종의 비육이 상

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학력 수준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직종 구성의 고도화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 10년간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업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먼저 일자리를 만들자. <대전제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경제가 살아 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생긴다.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발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GDP 산출 공식을 보면,

$$Y = C + I + G + (X-M)$$

C : 현재내수 침체

G : 정부지출 (공무원 늘리기, 뉴딜, 신행정수도 이전) → 국민의 세금.
제살 깎아 먹기

(X-M) : 순 수출 2004년 400억불 흑자

I를 늘려야 한다.

400억불 무역 흑자를 낸 것은 다름 아닌 기업. 그러나 투자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현재기업 부채 비율을 100%이하 이다.

1) 투자유도!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I) 정부 육성책 보다는 규제를 간소화 하자 - 출자총액 제한 폐지.(순환

출자는 막고) 파산기업과 관련된 총체적인 법규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 ii) **노동시장 규제 완화** - 세계은행의 노동시장 규제 지수 조사해 보면 한국의 고용조건 규제 지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고용조건 유연성은 133개국 중 109위권에 머무는 수준이다.
- iii) **노사갈등 해결** → 외국기업이 보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이다. 강성노조, 노동자 보호, 현 정책이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

- I) 클러스터 기업도시에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한다.
- ii) 산학연계, 특 화학과 등 교육시스템을 개편한다.
- iii) 청년 실업 대란 속에서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는 미스 매치 현상을 해소해야한다. → 구인 활동 시 인프라 구축.
- iv) 국민들 반 기업 정서 해 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v) 일자리는 창출!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다. →기업 임금 피크제 도입.

4.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각계각층의 자세와 정책 과제

>> 경제 활동의 3주체 정부, 기업, 국민의 상생과 화합.

1) 정부

- 규제 최소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을 비롯한 국가 구성원들이 경영활동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성장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 미스매치 현상 해소

- 국민 반 기업정서 해소

i)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강화** → 장기화에 따른 인적 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ii) **중소기업 및 청년층 창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청년층 실업이 줄어든다.

iii) **취약 청년층 직업 능력 제고** → 청년층 가운데서도 여성, 저학력자, 장애인 등의 실업이 감소되고 인재를 적절히 등용 할 수 있다.

2) 기업

>>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서 투명한 경영을 통한 국민 신뢰 형성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의 발화점이 되어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i) **외국 기업** - 한국의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해야 한다.

ii) **한국 기업** - 무조건적인 해외 투자보다는 전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R&D같은 핵심 분야는 국내에 남겨두어 국가의 부를 축척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민

>> 반 기업 정서 해소 및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경제 3주체의 하나로써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 정부, 기업, 국민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경제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대학

>> 산업과 연계하여, 각 대학이 모든 과를 골고루 잘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의 핵심 산업 군을 나누고 그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바꾸고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5) 대학생

>> 천편일률적인 취업 준비를 접고, 자신만의 분야를 설립하여, 한 분야의 전문가 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선호, 생산직 기피, 안정적 직업 선호, 특정 전문직 선호(의사, 변호사), 중소기업 기피 등 오래 지속되어 온 왜곡된 직업관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 《발제문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

김재성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연기금, VC 그리고 경제활성화

김 재 성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1. 들어가며

얼마 전 정부는 연기금을 활용한 경기부양 정책인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기금의 비효율적 활용 내용(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투자한 후 다시 원금을 회수하는 Project Financing 방법 때문에) 때문에 비판을 받으며 아직까지 정책이 표류 중이다.

그 이후 연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아쉽게도 좋은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이렇게 글을 써 본다.

2. 현재 연기금의 상황

현재 연기금은 13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에 투자되고 그 이외 아주 일부만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아시다

시피 현재 저금리로 채권시장의 투자 메리트는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렇다고 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두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도 없다. (현재 약 6%정도 투자하고 있다. 점차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만약 주식시장에 모두 투입한다면 주식시장의 왜곡을 불러와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활용방안 중 현재 필자가 생각한 것은 VC(벤처캐피탈)육성에 연기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VC란 소규모 기업 중에서도 아이디어 및 경영 능력은 보유했음에도 자금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 기업이 성장하였을 때 투자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VC를 연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경제침체, 실업문제, 기술력 약화, 이공계 기피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VC육성 =>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투자 위축 해소 => 벤처 중소기업의 활성화 =>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 & 신기술개발로 인한 기술문제 해소 & 이공계 기피현상 타파 => 경제 활성화 및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양극화 해소 => 국민소득 20,000불 달성 및 국가경쟁력 제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VC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VC와는 조금 다른 개념 임.)

3.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주소

1) 우수한 기술력

[INKE 2002] 화제의 참가자 : 하인츠 키에르호프 <이사>

"한국 벤처기업과 독일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확고한 네트워크를 기대한다" INKE 2002 참가자중 유난히 키가 큰 벽안의 독일신사가 주목을 받았다. INKE 독일지부를 통해 서울 행사에 대해 듣고 베를린에서 급히 온 하인츠 키에르호프 BBDC 이사가 주인공이다.

BBDC(Berlin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는 베를린 주(州)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업이다. 독일 정부와 대기업들이 제공하는 운영자금으로 매년 70여개 정도 기업을 지원한다. 그는 "BBDC는 지난해부터 아시아로 눈을 돌려 일본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하다가 한국 벤처기업들의 기술력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벤처기술력에 관한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키에르호프 이사는 INKE 행사기간동안 분주하게 정보통신 분야의 CEO들과 접촉하며 독일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그는 "베를린은 동유럽 개방과 EU(유럽연합)의 회원수 확대 이후 유럽의 지리·경제적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뛰어난 인프라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IT 및 바이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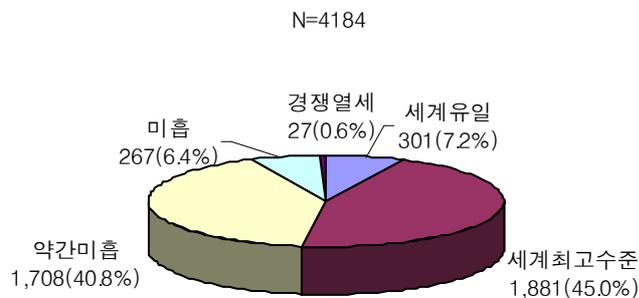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에르호프 이사에 따르면 베를린은 연구소와 기업 및 해외 시장을 잇는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요지다. 한국 기업들이 베를린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유럽시장에서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게 그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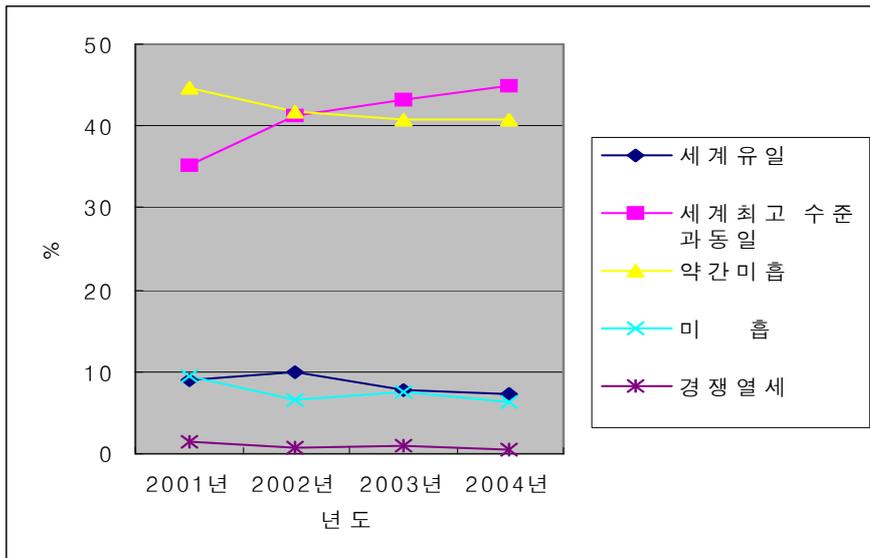
◎ 기술력 수준

○ 벤처기업 기술력 수준에 대한 자체평가 또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2004년 조사에서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면, 자신의 기술력수준이 세계 최고수준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





- 2003년도 조사에서도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면, 자신의 기술력수준이 세계 최고수준과 비슷하거나 같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0.8%를 차지하고 있고, 약간 미흡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40.8%를 차지함

2) 벤처기업의 자금난

◎자금사정

- 2004년 조사시점 현재자금사정에 대한 인식으로는 어렵다고 응답한 업체가 55.5%, 보통 30.5%, 좋다고 응답한 업체는 14.0%로 조사됨.

[표-1] 벤처기업의 자금사정

매우 양호	양호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
127 (3.1)	444 (10.9)	1,247 (30.5)	1,520 (37.1)	754 (18.4)	4,092 (100.0)

○ 자금사정이 좋다 34.2%, 보통 46.2%로 응답하였던 2002년도 조사 결과와 어렵다 50.5%, 좋다 22.1%, 보통 27.5%로 응답하였던 2003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2004년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은 대체적으로 다소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2] 투자자금 조달 현황

(n = 기업수)

투자기관	자금원 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1/4분기
창투자 등 벤처캐피탈	1,278.3백만원 (n=261)	1,542.1백만원 (n=183)	1,214.0백만원 (n=62)
타 기업	646.7백만원 (n=104)	877.7백만원 (n=92)	887.7백만원 (n=35)
금융기관	874.9백만원 (n=224)	812.2백만원 (n=224)	828.3백만원 (n=92)
개인투자자(엔젤)	783.5백만원 (n=216)	713.4백만원 (n=167)	564.5백만원 (n=66)
중진공 등 정부투자기관	292.5백만원 (n=200)	407.0백만원 (n=254)	380.1백만원 (n=108)
기타	868.4백만원 (n=11)	1299.9백만원 (n=8)	5183.3백만원 (n=3)

○ 2003년도 조사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업체가 급감한 것은 벤처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반증함.

- 2003, 2004년 벤처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와 구축이 매우 시급함.

3) 벤처기업이 바라는 지원정책

◎ 벤처창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기대 조사

-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기술혁신이 촉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배려가 무엇인지를 당사자인 벤처기업의 입장에서 응답하도록 함

[표-3] 벤처활성화 및 기술혁신 촉진 정책

복수응답수(비율)

항 목	응답수 (비율)
경영지도, 마케팅 등 종합지원	550 (7.1%)
법률, 회계, 세무 등의 실무 업무지원	214 (2.8%)
판매, 유통 및 수출지원	1707 (21.9%)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진출 지원	366 (4.7%)
공용 첨단시설 및 장비 지원	517 (6.6%)
대학 및 연구소와의 기술개발 지원	397 (5.1%)
전시장 및 회의장 등 부대시설 지원	86 (1.1%)
지역내 기업체간의 상호 협력 지원	282 (3.6%)
벤처캐피탈, 담보대출 지원	1262 (16.2%)
각종 행정처리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438 (5.6%)
IT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86 (7.5%)
첨단 기술개발 자금지원	1373 (17.7%)
합 계	7,778 (100.0%)

- 조사결과, 첨단 기술개발 자금지원(17.7%) 및 벤처캐피탈, 담보 대출 지원(16.2%)등의 금융지원이 총 33.9%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지원수단으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유통 및 수출지원을 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21.9%로 2위를 차지하였다.

(* 중요 요인 두개를 선정하는 복수응답)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은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금융지원 및 경영지원)가 미흡해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좋은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때문에 벤처기업의 최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위 벤처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벤처기업의 문제점은 벤처기업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 장치 미흡에 있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그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VC가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4. VC의 필요성

위에서 자금지원과 경영지원이라는 것을 동시에 벤처기업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현재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줄 수 있는 것이 VC라 생각된다.

VC의 천국이라는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 및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 배경에는 많은 VC들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에도 미국은 이러한 VC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경쟁력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벤처기업이 어떤 VC에게 투자를 받느냐에 따라 그 벤처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정도이니 말이다. 미국의 VC는 이처럼 벤처기업의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그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 즉 벤처기업들은 철저히 자신의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된다. 그리고 그 이외 부분인 자금지원 및 사후경영관리 등은 모두 VC에서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VC육성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과거 정부는 퍼주기 식 벤처기업 지원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앞으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피하고 VC를 통한 벤처기업의 지원을 장려하여 벤처기업이 진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VC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경기침체, 기술력 하락, 실업문제 및 경제 활성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5. 마무리

연기금 활용방안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인 VC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나름대로의 논리로 글을 전개하였지만 여러 가

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사례도 많이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연기금 운용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야 할 문제라 판단된다. 조만간 기업연금이 출범하여 연기금에 가세한다면 더욱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기금 운용을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그리고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스펙을 넓혀 보다 다양한 분야에 연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이다.

이러한 부분에 좋은 예가 바로 캘퍼스와 401K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VC 또한 진진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현재 벤처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 놓고는 있지만 돈 퍼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 잘 짜여진 틀에 의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식 이라는 말이다. 차라리 VC라는 것을 활성화해서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벤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다. 한마디로 벤처생태계를 다시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벤처활성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기금 VC 그리고 경제활성화로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로 우리나라에 힘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정책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 《발제문

대한민국 외교정책에 바람

권 은 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보장과 통일을 앞당기는 외교적 역할

권 은 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 들어가며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은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진전은 재화 · 노동 · 정보 · 문화의 교류가 특정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 특정 국가의 규제와 영향력을 축소시킴과 동시에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고도의 전략적 정책을 구사하게끔 하였으며, 정교한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세계화는 국가간의 행위에 있어, 행위자 국가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행위자인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쳐, 한 가지 행위가 각 국가마다 다른 이해와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정 행위가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을 가져오게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게 된다. 국제관계에서의 다양한 이해와 영향력이 균형상태를 이루는 점에서 행위가 결정되기도 하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외교 전술을 통해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도 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 미래가 걸린 한반도의 통일, 북한의 핵문제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중국과 미국, 남한과 미국, 혹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양자 혹은 삼자, 다자간의 이해와 영향이 반영되기에 결코 쉬운 해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며,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매우 혼란스럽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의 지혜롭고 적절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현재의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고, 더욱 악화되어 외교적·경제적인 압박과,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제재 등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족의 분단의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통일된 조국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보다, 당장의 민족의 생존과 안위를 심각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네의 안보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보자.

2. 안보보장과 통일을 앞당기는 외교적 노력

1) 북·미관계의 Dilemma

한반도의 핵위기 해결책에 대하여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반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자기들의 핵계획은 미국이 도발하는 군사

및 핵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면서, 묵시적으로는 현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양국간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안보가 보장될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조건이 핵계획의 포기이고, 현재의 문제는 동북아 전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 회의에서 토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반복할 수 없는 폐기”를 요구하며,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핵을 이용한 공갈”로 간주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상호 강압을 통한 위협수단과 대화와 양보의사표명을 통한 회유 수단을 번갈아 구사하며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한 이후, 북한은 핵개발 시인으로부터 핵개발 재개의지 표명을 거쳐, 핵 보유 발언에 이르기까지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적 고립 강화와 저장도 경제제재를 통해 시간을 끌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측은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고 태도를 바꾸도록 고집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는 전쟁 불사의 의지표명까지도 간접·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는, 미국은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고려하기보다, 안보

리 상정을 통해, 적극적인 북한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결국은 북한 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적인 악수를 두도록 유도한 다음 국제적인 명분을 축적하고 이후 북한 정권의 교체를 노린다는 해석도 분분히 제기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도 북한도 서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한반도의 안전 및 통일에로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기본적 해결은 사실상 북·미 사이의 타협이다. 북한이 조건 없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역시 북한의 요구 조건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전면적으로 치닫을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다. 결코 핵문제의 승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안보보장과 통일을 앞당기는 외교적 노력

①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외교적 영향력 증대

현재 북핵의 중심점은 북한과 미국인 상태이다. 남한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중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의 생존과 운명이 달린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북한과 미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어느 편에 서야할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목만

합의된 이래 한발짝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합의서에는 정치적 화해, 군사적 불가침,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먼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뒤로 미루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제한조치, 군축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반도의 신뢰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 그 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가로 한반도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신뢰구축의 분위기는 성숙되어 왔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하여 분단이후 처음으로 비무장 지대를 개방하였고, 남북한 군인들이 동시에 동원되어 지뢰제거 작업과 건설공사를 하였다. 일반적 신뢰구축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³⁾ 문제는 이러한 남북한의 교류 및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을 증대와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을 표방하지만,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 지원과, 그로 인한 북한 경제의 남한 의존은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현재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경제재건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제재건에 필수적인 자금·기술·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외부의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 남한의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인도주의의 원칙인 탈정치성·형평성·독립성을 유지하되 지원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호성 지원에서 개발사업 지원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관계를 이루기보다 보완관계를 형

3) 선진통일의 길, 여의도연구소

성하여 지속적 지원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한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분명 증가시킬 것이다. 남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북한이 입는 타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북한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외교적 발언권을 높여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역량 강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남북관계만을 강조하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균열시킨다면, 근본적인 안보체계가 위협받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 세계경제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연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에 비추어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할 뿐 아니라 수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여 안보보장 뿐 아니라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다자간 경제 · 안보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하여 역내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노력은 동북아의 역내 갈등 완화는 물론이고 남북한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동북아 다자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통일정책에서의 한국의 주도력 강화에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교·통일·국방의 분야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밀바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와 같이, 북한 문제는 외교문제인 동시에 국방·통일문제인 것이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외교관들이 뛰어드는 외교가 아니라, 평소에 구축한 관계와 시스템이 위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민간외교의 활성화

북핵문제의 완만한 해결 뿐 아니라, 장기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간외교가 필요하다.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에는 민간 외교가 필수적일 것이다.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정상간의 만남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동질성을 확인해 가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국제세력의 간섭을 줄이고 우리의 통일 주도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발해사 왜곡에서 보듯이 이 문제는 단순히 학술적 차원에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민족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공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간 역사복원을 위한 공동 노력이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게 된 문제이다.

민간을 통한 북한의 교류 확대는 북한사회의 개방과 개혁에 필수적 요소일 뿐 아니라 남한 사회 내에서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다. 급진적이고 급격한 한반도의 통일은 서로에게 충격과 상처를 안겨줄 것이고, 그 상처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민간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④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중재

북한체제의 위험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원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 역시,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유리한 협상 위치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적 · 외교적 고립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 97년 4월과 200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ADB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 일본 등 주요 회원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ADB 가입에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의 가입을 막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적 · 외교적 고립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크다. 대량 탈북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보아, 견고해 보이는 북한의 패쇄체제 역시 동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 북한 정권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분명 ‘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역사적 흐름을 거스릴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역사적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개방·교류 · 원조는 북한사회의 소리 없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3. 마치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적인 세계질서의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국제적 사건이 될 것이므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비롯한 외교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며, 통일 비용의 감당을 위한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는 외교정책과 협상능력을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좁은 의미의 민족적 공조와 국제공조라는 이분법적 갈등을 넘어서서 민족적 국제공조라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공조 없는 민족

공조는 자신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적 규제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반면에, 민족공조 없는 국제공조는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함께 추진하여,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생존권을 서로 모순 되지 않게 확보해야 한다.⁴⁾

현재 한반도의 안보는 남북이 대치하는 이상,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북한의 통일과 안보의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이다. 그러하기에 남북한의 노력 뿐 아니라 국제적 수반될 것이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남북한의 안보와 궁극적인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역량을 다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의 보장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치명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정치·사회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의 보장과 통일이 단순히 바램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고 외교적 역량을 최대화시켜 한반도의 운명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4) 북핵위기의 처방, 하영선(서울대)

《 《발제문

청년이 만들어가는
한국사회의 신문화

조민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Cyber Space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조민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1. 들어가며

지금 대학생 청년들의 문화는 어떠할까?

문득 이 말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다. 이는 현재 우리 대학생 청년들의 문화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 70-80년대의 대학생 청년문화의 특징으로는 저항문화를 들 수가 있다. 군부독재시대 하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부에 대해 학생들은 분개하고 비판하며 직접적으로 운동권에 투신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에 학생들이 서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의 대학생 청년들은 정부의 정책과 정치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토론문화가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허나 지금의 학생들은 어떤가. 1987년의 6.29선언이후 지금까지 우

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다.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의 저항문화, 운동권 문화는 분명 많은 변화를 안팎으로 받게 되었다. 우선 그동안의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저항과 폭력투쟁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정치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생운동은 그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는 기존의 청년문화가 변화해 가고 있고 또 변화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문화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응당 변화하게 되어 있다. 구시대적인 문화는 현재의 사회에 맞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문화가 발전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자신들의 문화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하듯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의 청년문화는 앞서 말한 것처럼 쉽게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여러 다양한 하위문화가 편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문화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거70-80년대의 청년문화

과거 70-80년대의 청년문화를 바라보면 당시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 속에 그들의 문화는 자유롭게 펼쳐지고 발전할 수가 없었다. 책을 읽어도 검열에서 통과된 책을 읽어야 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과 토론을 하고 싶어도 캠퍼스 내를 유유히 걸어 다니는 경찰들에 의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없었다.

1) 70년대의 청년문화

70년대의 문화를 얘기하기에 앞서 1975년 5월의 “긴급조치 9호”⁵⁾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른 이 조치가 발표되면서 대중가요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루어졌다. 허락 받은 노래만 불러야 하고 허락 받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 반대쪽에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이른바 '건전가요'가 있었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대중조작이 노래의 양 축, 즉 건전가요와 금지곡으로 나타났다. 그럼으로써 건전가요와 금지곡이 단순히 건전한 대중문화 진작 차원이 아니라, 당시 강력하게 추진되던 '국민의 의식과 정신개혁'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우리들은 70년대의 청년문화를 청바지, 생맥주, 통기타로 특징짓는다. 허나 이는 정부의 억압적인 규제와 단속 속에서 어렵게 피어난 청년들의 대항문화였었다. 전 학교의 병영화를 추진한 69년의 교련실시, 71년부터 대학 안에 장갑차를 밀고 들어왔던 위수령,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그리고 긴급조치, 75년 4월의 인혁당 사건에 이르기까지 70년대는 누구보다도 청년들에게 갑갑하고 암울한 시기

5) <긴급조치 제9호>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활동을 제외한 학생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행 당시의 그 소속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방송, 보도, 제작,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마. 승인, 등록, 인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였다. 앞뒤로 짝짝 막혀버린 흑백의 70년대. 그러나 그 시대에도 꿈틀거리는 총천연색 젊음은 숨을 쉬고 있었다. 청바지, 생맥주, 통기타로 대변되는 70년대 청년문화, 전후 세대였던 청년문화의 주인공들은 고도성장에만 세뇌되어 있던 부모세대와 사회 분위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2) 80년대의 청년문화

“넷째, 교육혁신과 文化暢達로 국민정신을 개조하려는 것입니다.”

1980년 9월 1일 육군 대장에서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등극한 전두환의 제 11대 취임사 중 일부이다. 그리고 5공화국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문화예술 분야를 언급하였다. 또 민족문화 창달이 국정 4대 지표로 등극함으로써 문화가 국가의 적극적 통치 전략으로 격상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허나 이 이면에는 정부의 다른 의도가 숨어있었다. 대규모 군중동원으로 문화정부의 이미지를 수립하려 하였으나 전통문화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민중들마저 자신의 권력 안에 수용하려 했던 것이다. 여기 당시의 “국풍81”⁶⁾ 사건을 보면 그 당시의 대학생 문화가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다. 5공화국은 정권의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정부적인 태도에 신경이 쓰였었다. 때문에 이들 청년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을 저지하고 반정부적 태도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국풍81”이라는 국가적인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

6) 1981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한 문화행사.

다. 여기에 대학생들의 동아리 중 사회과학 동아리들은 강제 해체 및 지속적인 감시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정부는 이와 아울러 “청년의 열과 의지와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학생들을 포섭하려 했다. 폭발적인 민주화의 열망으로 술렁이던 대학가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들을 체제내화시키고자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청년의 열과 의지와 힘이다.”라는 구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80년도부터 퍼져 나가기 시작한 각 학교의 탈반을 국풍에 참가시키고자 한 것이다. 허나 민속동아리 또한 사회과학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한 저항문화가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었다. 정작 국풍81 축제 당일에 참여한 대학생 동아리들은 거의 없고 전경들과 가짜 대학생만이 참여한 하나의 연극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3. 변화하는 사회

정보화 혁명 이후 지금 현재 지구촌은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출현이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특징을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개방성, 참여성, 공유성, 저항성, 익명성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이다.⁷⁾

이는 과거 70-80년대 청년문화의 상징인 저항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허나 과거와 현재의 사회는 다르다. 어느 정도의 민주화를

7) 박창호, “사이버공간의 사회학 : 정보혁명이 문화를 바꾼다”, 정립사, 2001

이론 지금은 과거 386세대와는 다른 문화를 가져야 한다. 또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흔히 “사이버 세상은 위대한 평등자” 라고 한다. 이는 현실 세계와는 다르다. 현실세계에서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이버 세상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 놓여 있다.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현실 오프라인 속에서 보다는 훨씬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보화 사회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공론의 장 역할을 톡톡히 해 주는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오늘도 뉴스기사에 클릭을 하고 뉴스를 접하고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입력한다.

1) 신학생운동

과거 70-80년대와 같이 지금도 대학 내에는 학생운동이 존재하고 있다. 허나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도 변했다. 그렇지만 학생운동계의 의사 표현 방식은 변화하지 않았다. 학생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강경노선과 폭력성이다. 이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회 속에서 정당성을 가지기가 힘들다. 시대고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좋은 수단이 될 수 없다. 과거 역사 속에서 민중, 청년들이 일으킨 혁명들은 제도화된 수단 하에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과거 자유당 정권하에서나 군부독재시대 하에서는 국민들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국가의 정책에 반영이 되지 못하였다.

허나 지금은 다르다.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데에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과거와 같은 폭력적인 학생운동은 목표가 아무리 좋더라도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인해 정당성이 확보 될 수가 없다.

학생문화를 대표하는 학생운동도 분명 변화하여야 한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조직적인 명령하달식의 학생운동이 아니다. 누구나 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가 있다. 또한 탈권위주의 시대에 들어선 지금 학생운동도 탈권위화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2) 신문화 운동

사회를 크게 세계의 섹터로 - 정치, 경제, 문화 - 나누어 보도록 하자.

과거 90년대 이전까지 이 세 섹터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주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허나 90년대 이후 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즉 정치 분야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경제 분야는 30-40대의 중년층이 주도하며, 문화 분야는 20대 청년층이 각각 주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장년층이 세계의 섹터를 통합하고 주도하려 했던 때와 비교해보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발전적이라고 볼 수 가 있을 것이다. 또 분명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각각 다르다. 다른 것은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같다고 밀어붙이면 당연히 내부에서 반발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문화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수단화 되었으며 억압받는 존재가 되어 왔었다. 허나 문화는 분명 두 섹터(정치,경제)와는 다르다. 문화를 이 두 섹터와 통합하여 정책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는 “정경(政經)유착”을 초월하는 “정경문(政經文)유착”인 것이다.

또한 흔히 청년문화를 전체적 문화나 주류문화와 대비되는 부분적, 하위적 문화인 서브컬처의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서의 청년문화는 단순한 하위문화가 아닌 문화 전반에 큰 주류를 이루는 주류문화로 성장해 가고 있다. 또 단순히 기성 문화에서 얻을 수 없었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구 충족에서 벗어나 문화계 전반에 청년들의 문화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사회를 넘어서 정보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 에서의 활동은 이미 20대 위주의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비롯된 여러 문화들 중에는 폐인문화 등의 새로운 하위 문화들이 파생되고 있다.

3) 사이버 스페이스 에서의 청년문화

과거 70-80년대의 청년문화를 뒤돌아보면 암울했던 시기의 청년들의 자유를 꿈꾸는 희망과 패기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70년대 당시의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단순히 사랑노래이기보다는, 은유적이지만 사회 현실에 대한 발언, 자기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현재의 청년문화는 어떠한가?

앞서 서론 부분에서도 밝혔지만 오히려 억압받던 과거의 저항문화로 대표되는 청년문화에 비해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여러 하위 문화들이 편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청년문화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더 좋아진 것이 아닌가 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고 사이버 스페이스를 돌아다녀 보라! 과거에는 시대의 억압적인 문화정책 하의 암울한 사회에서의 일탈을 꿈꾸었고 자유를 꿈꾸는 청년들의 문화는 젊은이들의 열기와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 학생운동은 전근대적인 강경노선을 아직도 취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의 장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청년들은 시사문제에 대해 무비판적인 사람 내지는 무조건 내 의견이 아니면 모두 나쁘다 라는 식의 철저한 개인 감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끔찍한 강력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장난을 치기도 하고 국제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무조건 감정적으로 욕설을 내뱉는다.

흔히 한국사회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는 큰 담론의 시대가 지났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향후 몇 년간 한국사회의 미래를 결정지을 몇가지 의제(Agenda)를 떠올려보자. 통일, 세계화, 정보화,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경제발전시스템의 모색, 환경파괴등 어느 것 하나 단순하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개개사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지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미래가, 그 구성원들 개개인의 삶이 귀착될 수 있다. 민주화의 시대가 지나자마자 한국사회는 새로운 문제와 패러다임을 놓고 격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0대의 인터넷 사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청년

문화는 점점 그 색깔을 잃어 가거나 10대 Low-Teen의 영향력에 동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10대 Low-Teen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놀이의 장으로 생각을 한다. 이는 20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재미가 있지 않으면 아예 눈길을 주지 않고 관심 밖으로 내 차 버린다.

과거 70-80년대의 일탈을 꿈꾸는 청년문화는 21세기에 와서도 똑같이 일탈을 꿈꾸지만 전자의 일탈과 후자의 일탈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일탈은 민주화를 꿈꾸었고 자유를 꿈꾸었다. 허나 후자의 일탈은 비윤리적이고 재미와 장난을 위한 일탈을 꿈꾼다. 고 김선일씨의 처형장면에 대한 청년세대들의 무분별한 동영상 유포와 감정적인 행동은 이에 대한 극명한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청년문화의 전체문화에 대한 기능적 관계에는 동조·일탈·대항을 들 수 있다. 부분문화는 전체문화에의 편입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인문화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일탈적 요소(예를 들면 비행문화)를 포함한다. 또, 전체문화의 혁신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대항문화(counterculture)라고도 한다.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청년문화는 이들 세 가지 기능을 나누어 가지는데, 청년들은 전체문화의 혁신을 지향하는 바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한국 사회 또한 과거의 암울했던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사회가 아니다. 새로운 열린사회로의 가능성을 쥐어준 사이버 스페이스의 탄생 또한 보다 발전적인 청년문화의 장이 되어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체 문화의 혁신을 주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과거와 같은 정경문(政經文)유착을 보여서는 안된다. 정치적으로 청년들의 문화를 방해해서도 안되고 이용을 해서도 안된다. 21세기 열린사회, 건강한 청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청년문화를 단순히 부분 문화나 일탈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탈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그리고 공무원이 시민에게 무턱대고 권위를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 정치권 또한 과거 권위주의를 훌훌 털어버리고 나아가서는 권위의 역전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정책적으로는 전체적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년문화 즉 대항문화를 육성해야만 한다. 현재의 청년문화는 다양성 측면 보다는 오히려 궁극적으로 획일화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각종 국가 정책 및 외교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을 초청하여 공개 세미나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공동체 형성과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의 청년문화가 청소년 문화에 종속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된다.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청년문화의 정립이 우선되어야만 청소년 문화도 건강해 지는 것이고 전체문화도 건강해 지는 것이다. 청년문화는 청소년 문화와 성인문화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이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새로운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그간 우리의 문화는 자율성이 떨어졌었고 이질성을 인정해 주지 않

왔다. 이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좀 더 적극적인 문화 창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절실한 것은 바로 “문화혁명”이다. 문화를 상업화하는 차원에서의 문화산업을 논하는 저급한 차원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의식과 관행의 혁신을 단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범과 원칙, 관행, 그리고 권위를 세워나가면서 시민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문화혁명일 것이다. 새 시대의 규범과 원칙은 인간존중, 자연과 공생,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과거의 강경노선이나 폭력은 이제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서로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무조건 배타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주도하는 정치권과 30-40대가 주도하는 경제권, 20대의 문화권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고 그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견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건강한 신문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